

투표율 전남 65.7%·광주 54.3%...지난 지선보다 높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은 60% 중반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광주는 54%대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마감 결과, 광주는 전체 유권자 118만9519명 중 64만5848명이 투표해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60.4%보다 6%p가량 낮은 수치로, 제주(56.4%)보다도 낮았다.

다만,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이 37.7%에 그쳤던 것에 비해 16.6%p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5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구 55.1%, 북구 54.3%, 서구 54.1%, 광산구 52.8% 순으로 모두 과반을 넘겼지만, 60%를 웃도는 곳은 없었다.

전남은 전체 유권자 155만8206명 가운데 102만4147명이 투표에 참여해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보다 5.3%p 높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남 투표율 58.4%에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전남 7.3%p·광주 16.6%p ↑
진도·신안 80.7% 최고...광주 광산구 52.8% 최저
통합특별시 출범 기대 투표장 향해 무관심도 여전

비해서도 7.3%p 높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신안·진도군은 80.7%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목포가 56.9%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완도군 79.2% △구례군 79.0% △함평군 77.4% △강진군 76.9% △장흥군 74.6% △보성군 76.1% △곡성군 75.2% △담양군 74.5% △고흥군 72.1% △영광군 70.5% 등으로 70%가 넘는 투표

율을 기록했다.

또한 △장성군 67.3% △해남군 66.8% △순천시 65.7% △화순군 64.9% △영암군 64.0% △무안군 63.0% △나주시 61.6% △광양시 61.3% 등도 60%를 웃돌았다. 여수시 58.3%, 목포시 56.9%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전남이 38.95%, 광주는 27.83%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가장 높았고 광주

도 3위를 기록했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을 선출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나마 투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권자 무관심도 여전히 지역의 투표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분주한 개표작업 전남광주 공정선거감시위원들이 3일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마감 이후 광주 동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 접수부터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결과 보고 및 정리부까지 개표과정 전반을 참관했다. 정당·학계·시민단체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감시단은 투표인내선 발송부터 사전투표소 운영, 사전투표함 회수, 사전투표함 보관장점 점검, 투표지분류기 검증, 선거일 투표와 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해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80명 투표없이 당선

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
광역의원 35명...기초·기초비례 43명
'순천 6' 신민호, 3회 연속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 80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3명 모두 80명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전체 출마자 중 10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등록과 함께 무투표 선거구로 결정됐고 투표 없이 선거일인 이날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은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가 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7명 늘어난 규모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현직인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 등 2명이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이날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인이 됐다. 각각 재선거 3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70개 선거구 가운데 34곳에서 단독 후보만 등록해 전체 지역구 의원 정수 79명 중 43%가량이 투표 없이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단독 입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는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24명 가운데 5명(20.8%)이 무투표 당선됐다. 동구 1곳, 서구 2곳, 남구 1곳, 광산구 1곳 등에서 민주당 후보만 등록했다.

전남은 상황이 더 두드러졌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 5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명(52.7%)이 투표없이 당선됐다.

목포 1·3·4, 여수 2·5·6, 순천 2·5·6·8, 나주 1·2, 광양 1·4, 담양 1, 장성 2, 구례, 고흥 1·2, 보성 1, 화순 1·2, 완도 1, 해남 2, 영암 1·2, 무안 1·2, 신안 1선거구 등이다.

이 중 순천 제6선거구 신민호 후보는 역대 최초로 3회 연속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각각 3명을 선출하는 북구 다선거구와 광산구 라선거구에 후보 3명씩만 등록해 모두 당선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가, 여수가, 고흥가, 완도 나, 신안 라선거구 등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고흥군의회의는 전체 4개 선거구 중 2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도 2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선거구별로는 광주 동구와 전남 구례·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 등이다.

정당별로는 무투표 당선자 80명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다른 정당 후보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 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통합특별시 첫 지도부·지방의원 등 당선인 집결
“오월 민주정신 계승·통합특별시 성공 출범 다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며 통합특별시 시대의 첫 출발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이

날 오전 11시 15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원 전남도당위원장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기초단체장 당선인,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등 민주당 소

속 당선인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주묘 앞에서 집결한 뒤 공동 헌화와 분향, 개별 헌화를 진행하며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릴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함께 묵념하며 민주주의와 방자지 발전의 의미를 되새긴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당선인 소개와 함께 김이원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또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인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합특별시 성공출범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이번 합동 참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전투표 했는데 또’
목포서 중복투표 사례 접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전남 목포에서 중복투표 사례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가 나섰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중복투표 사례 외에 유권자 소란이나 투표 방해, 투표용지 훼손 등 특별한 사건·사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선거관리 능력 ‘도마’

유권자 참정권 행사 차질...선관위, 한밤에 대국민 사과
국힘 “개표중단” 요구...정치는란 더해 법적공방 가능성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지를 긴급히 이송하고 투표소에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할 수 있게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으며 유권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반적인 선거관리 역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 중 일부는 기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긴

이후까지 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에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여야는 선관위를 질타하며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빨리 해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층 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보수세가 비교적 강한 ‘강남권’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투표 공정성은 깨졌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청와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정청래 책임져야”...민주당 지도부 정면 비판

김영록 지사 “호남 민심 외면·우용” 강도 높은 비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종료! 이 시간만 기다렸다. 민주당을 흠뻑 낼 수 없어서”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호남은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당대표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용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호남팔이를 집어치우고 영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부 교체에 위한 연대 투



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경선 논란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ARS 투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제조사와 함께 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대한 오류와 실수가 확인될 경우 경선 무효화 등 책임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원 논란과 ARS 투표 장애 문제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